광주·전남 다시 시작하자 하 시민사회

시민 없는 시민단체 참여도 관심도 부족

■ 초라한 현주소

'시민 없는 시민단체'는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마디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운동이 아니라 일부 명망가 중심의 하향식 운동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4·11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후보 추대 과정의 불협화음도 이런 폐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범민주 시민후보'로 내고도 2.72%를 득표했을 뿐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시민후보가 거둔 성적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4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정치개혁, 반부패운동, 환경 등 정치와 정부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단체는 난무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인권, 복지 등을 다루는 단체는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불신'과 '시민 무관심' 속에 회원 없는 '구호' 시민단체의 수만 늘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상당수의 시

광주 400여 단체 난립 회원 100명 미만 태반

민단체는 회원이 적어 해체 위기에 놓이고, 재정압박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시민단체 5~6곳을 제외하면 상근 근무자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회비를 내는 회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 운영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구조 취약이나 일부 명망가 중심의 사업 진행 등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 스스로도 고개를 저을 정도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시민후보 추대는 그 취지나 절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현실 정치 참여라는 한계와 시민과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 실패라는 쓴맛을 본 계기"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의 정치·제도권 중심의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기홍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선거 낙선운동이나 특정후보 추대에 치중하면서 정치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정치를 떠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각계 진단과 제언

김영삼 '우리민족' 사무처장

"시민 정치운동 반성"

시민참여는 시민운동의 가장 큰 목표이자 고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민단체들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평화·인권이라는 특성을 지키면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민들도 나눔과 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번 총선의 결과를 되돌아보며 시민 정치운동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박미경 '환경연' 사무처장

"시민들과 함께 호흡"

과거에서 탈피해야 한다. 최근까지 시민운동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확장·발전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시민단체가 정부나 지자체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만 한다. 시민·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여러 분야를 모두 잘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김광훈 에코바이크사무국장

"현장성이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된 배경도 시민단체들이 현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활동하다 보니 시민이 찾아갈 만한 시민단체가 없어지게 됐다. 한 발짝 물러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시·비판·견제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시민단체가 몸집을 키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집중해 각 단체만의 색깔을 나타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작은 규모의 시민운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성 속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교수·언론 등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안에 대한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참여·다양성이 생명"

시민운동의 생명은 시민참여와 다양성이다. 예전 단순 권력 감시에만 치우치지 말고 더욱 많은 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예로 지방자치시대에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지자체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정부·지자체·주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때로는 감시자로서, 때로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 자체가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참여하다 보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마을 가꾸기운동을 비롯해 직접 주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의춘 광주YMCA 팀장

"단체간 소통 필요해"

시민단체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시기다. 예전에는 여러 단체들간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연대하고 협력해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시민운동이 다양화되고 각각의 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통을 통해 힘을 모은다면 지역사회에서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젊은 활동가들을 찾아야 한다.

운동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다. 시민공동체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사회 '원로' 없어 갈등·분쟁 조정 한계

■ 구심점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빈발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단일 사안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조율·조정해야할 '지역원로'들도 무대에서 사라진 탓이다.

오는 2014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랜드마크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못한 채 5·18단체 및 진보단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논의를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지역미래를 좌우할 전당 개관은 4년이 미뤄졌고, 이 논란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와 그 대표 및 임원, 원로 등이 불거지는 지역갈등에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체의 순수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받지 못한데다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

문화전당 논란 4년 끌어 중재자 역할 토대 갖춰야

가 늘면서 다른 단체의 주의·주장에 섣불리 반대할 수 없는 내부 분위기 탓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재정난으로 신규 인력, 젊은 운동가들을 수혈하지 못해 내부 논의구조가 취약해지고 몇몇 상징적인 인물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누구 누구의 사조직이다'라는 말이 떠도는 것은 물론 거의 모든 단체가 대표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하향식' 운영이 고착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내부 논의 구조는 단체를 벗어난 '원로'들의 설 자리도 앗아갔다. 이념과 정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 지역 내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원로들마저 출신 단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가 각계 원로를 중심으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했는데, 이는 사실 시민사회진영이 해야할 역할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직·재정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 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는 연륜이 있는 원로들을 구심점으로 연대 및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 문제의 핵심 열쇠가 '시민'에게 있다는 점은 모든 시민단체가 인정하고 있다. 참여시민이 늘어날수록 논의 구조의 개방성과 단체의 선명성이 명료해지고 이를 토대로 한 시민단체 간 연대 및 협력도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즘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권력감시 중심에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 가꾸기 운동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주민 개개인이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오느니 한숨이다

판매가 용이하고 소득이 안정적인 손해보험 컨설팅

손해보험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1년마다 만기가 오기 때문에 고객확보가 쉽습니다. 화재보험이나 각종 배상책임 골프보험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도 많고, 고객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도 많아 보험영업이 처음인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컨설팅 전문가RC 삼성화재RC(Risk Consultant, 리스크 컨설턴트)는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관리하는 전문 금융인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소득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활용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자유로우며, 정년에 구애 받지 않는 전문직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제공 영업경험이 없는 분들도 선배들의 축적된 경험과 회사의 인프라를 통해 고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도 삼성화재만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내일의 행복을 여는 이름 삼성화재 RC
사업부 연락처 서울/강북 02-940-6011 서울/강남 02-3468-9405 서울/강서 02-850-6015 경기 031-230-1008 영남 051-461-5943 대구 053-607-7779 호남 062-612-5553 중부 042-603-1016

think Next 삼성화재 SAMSUNG